

〈제 68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신세계

◆ 멸종위기 동물에 응원메시지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본관 1층 광장에서 멸종위기 동물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SNS 인증샷 이벤트’를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포스트잇에 멸종위기 동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응원 메시지를 인증샷으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푸드 플라자 1만원 이용권(50명), 친환경 리유저블컵(100명) 등을 추첨·증정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광주은행

◆ 제31보병사단에 위문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역 향토부대인 제31보병사단(사단장 최순진)을 방문해 군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위문 방문한 광주은행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광주은행과 제31보병사단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31보병사단은 송종욱 광주은행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광주은행의 정기적인 위문 방문 및 위문금 전달과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했다.

보해양조

◆ 색다른 콜라보로 MZ세대 입맛 접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디저트 카페 설빙, 홈플러스와 협업해 ‘설빙 인절미 순화’를 홈플러스 단독 상품으로 출시했다. 설빙의 대표 메뉴 인절미빙수 콩가루와 우리쌀 순화 막걸리의 깔끔함이 어우러진 고소한 맛으로 ‘할메니얼’(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의 합성어) 트렌드를 반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ESG 위원회 출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은 지난 8일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섰다.

이날 출범한 ESG위원회는 정진철 조선대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ESG위원회는 앞으로 ESG경영 추진계획 심의·의결, 운영기준

제정, 성과관리·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책제안 및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회공헌활동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추진키로 했다.

박성수 이사장은 “이번 ESG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사회적 참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 사업화 유망기술 교류회 '성황'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선민)는 지난 8일 지역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유망기술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교류회는 기술도입 희망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법인

아이엠이 공동 개최했으며, 지역 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이 지역기업으로 이전 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여수 여석마을서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8일 여주시 화정면 여석마을에서 제32회 여수재난대응봉사회 낙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여수재난대응봉사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개도리 여석마을 24세대에 전기·가스 시설 정비, 코로나19 방역, 이미용 봉사, 페인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II. 광주경충 소식

〈제1557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김이재(지리학자/경인교대 교수) 주제:부와 권력의 비밀 地圖力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6월1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를 초청 「부와 권력의 비밀, 地圖力」이란 주제로 제155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세상을 바꾼 지리적 상상력, 세계 최고들의 책상에는 지도가 있다. 더 이상 지리는 물리적인 연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너지, 인적 자원, 부가가치 사슬로 연결된 새로운 질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부와 권력이 이동할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도력(地圖力)'이 필수가 되었다. '지도력'은 새로운 키워드로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 알려준다. 문명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때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한 오늘날까지 세계사의 흐름과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리의 힘'은 권력의 지도, 부의 지도, 미래의 지도를 제시한다.

지도는 단순히 비형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담아낸 지식의 총체다. 지도를 쥐는 자가 21세기를 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데이터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력은 새로운 관점으로 글로벌 이슈를 접근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문제 해결력이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의 운명을 바꾼 것도 지도력이다. 미국의 지도자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모두 지리의 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리더들의 공통점이다.

“신년에 달력을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이어령 선생님은 말했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도력, 4차 산업혁명시대 더 중요해진 지도력, ESG경영의 기초 지도력, 지도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면서 방대하게 펼쳐진다. 地圖力은 국력이다.



사무국 일지(6.6 ~ 6.10)

6. 7 (수)	● 6월 고용전략회의	6.10 (금)	● 제1557회 금요조찬포럼
6. 8 (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ESG위원회 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올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 경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발표 -

- 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선진국 최고수준에 도달하면서, 최저임금의 일률적 결정으로 인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수용성의 현저한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
- ②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다고 하여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제도임.
- ③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명백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과거에는 시행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커진 후에는 노동계 반대로 추진되지 못함.
- ④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한 업종부터 구분적용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
- ⑤ 경총의 미만을 통계는 통계청 원자료를 최저임금위원회보다 먼저 분석해 발표하는 것으로 최임위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통계와 동일하며, 시계열 분석의 유용성을 감안하면 미만을 및 업종별 격차의 확대는 명백
- ⑥ 경영계는 2017년 당시 충분한 논의없이 결론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결과에 동의한 바 없으며, 5년 전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려해야 함.

□ 경총은 6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동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공식적인 자리(기자회견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쟁점 검토

□ [쟁점1]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 검토 의견 】

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축소 초래

-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 표 1. 한국과 G7 국가의 최근 5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및 수준(2022년) >

구 분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5년간 인상률 (2018~2022년)	41.6%	7.4%	26.0%	14.6%	31.0%	12.1%	0.0%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62.0%	61.4%	60.2%	57.0%	49.4%	46.5%	27.3%

-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1인당 부가가치)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원으로, 제조업 1억 2,076만원, 정보통신업 1억 829만원과 큰 격차가 있음.

* (미만율)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40.2%인 반면, 정보 통신업은 1.9%에 불과해 두 업종 간 미만을 격차가 38.3%p에 달하는 상황

②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 경총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하였다.

-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쟁점2]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 검토 의견 】

① 업종별 구분적용 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과도

- 경총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單身)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적정 최저임금의 상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약 197만원)에 근접

② 주요 선진국,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중

- 한편,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7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그리스,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프랑스, 헝가리, 호주 등 13개국(G7 중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음)

③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인정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특히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헌재 판결문

[2019.12.27. 선고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중략)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이 사건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이 지역별, 산업별로, 호주가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쟁점3]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다?**

【 검토 의견 】

①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다.

②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

-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기에 법에 규정되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충분해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확대된 이후에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노동계의 지속적 반대 때문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자체를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표 2.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 및 미만을 추이 >

구 분	2002년	2010년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액	2,100원	4,110원	8,720원	9,160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33.4%	45.1%	61.2%	62.0%
미만을	4.9%	11.5%	15.3%	-

□ [쟁점4]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금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검토 의견 】

① 現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 구분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②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충실한 통계기반 구축도 필요

-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임에도 지금까지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은 그간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경총은 좀 더 세밀한 구분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통계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연구 및 통계기반을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쟁점5]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이다?

【 검토 의견 】

① 경총이 발표(‘22.4.18)한 최저임금 미만을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와 동일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하 경찰 부가조사)과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각자 발표하는 통계결과를 토대로 매년 최저임금 미만을 산출, 논의에 활용해 오고 있음.

-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한 원자료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먼저 분석하여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통계상 오류*라는 노동계 주장을 반박하였다.

* 노동계는 현행 경찰부가조사 미만을 통계의 ‘과다추계 가능성’을 주장하나, 주휴시간 미반영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② 동일한 조사의 미만을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을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

- 특히 경총은 통계청 경찰 부가조사 통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미만을 통계의 시계열적 특성 비교는 매우 유용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간 최저임금 미만이 매우 높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 경찰부가조사 기준, 전체 미만율은 2002년 4.9%→2021년 15.3%,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2002년 8.6%→2021년 40.2%로 31.6%p나 확대되었음.

< 표 3. 우리나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을 격차 추이 >

구 분	2002년	2010년	2021년	격차(’02~’21)
숙박·음식업(A)	8.6%	30.5%	40.2%	31.6%p
정보통신업(B)	0.8%	1.6%	1.9%	1.1%p
격차(A-B)	7.8%p	19.9%p	38.3%p	-

- [쟁점6]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하여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 검토 의견 】

- ❶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음.

- 경총은 당시 TF가 최저임금제도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지만, 이는 TF 위원들이 주도한 결론일 뿐, 경영계는 이에 동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노동계가 당시 TF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난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리하게 결론이 난 업종별 구분적용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 ❷ 2017년 당시와 지금은 최저임금 관련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측면을 고려해야 함.

- 2017년 TF 논의 당시 우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였으나, 이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인상되며 중위임금 대비 62.0%로 G7국가와 비교하여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설사 TF의 결론을 보더라도 당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을 노동계는 간과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5년 전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경총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면서,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끝.